

---

# 유사중복 사업 관리 사례

---

2014. 7.

연구책임자

홍승현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선미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b>I. 국내 유사중복 사업 관리</b> .....	<b>1</b>
1. 유사중복의 개념 .....	1
2. 정부, 국회, 감사원의 유사중복 관리체계 .....	1
<b>II. 미국 행정부의 유사중복 사업 관리</b> .....	<b>10</b>
1. 입법적 관리 .....	10
2. 행정적 관리 .....	15
<b>III. 감사원(GAO)의 유사중복 식별</b> .....	<b>16</b>
1. 미국 감사원의 유사중복 개념 .....	16
2. 유사중복 연간실태보고서 .....	18
<b>IV. 2014년도 연간실태보고서</b> .....	<b>21</b>
1. 권고조치의 이행여부 평가 .....	21
2. 이행조치 현황 .....	24
3. 2014년 신규 추가 부분 .....	27

# I. 국내 유사중복 사업 관리

## 1. 유사중복의 개념

-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사·중복, 관행·전시성 낭비사업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
- 정부, 국회, 감사원의 유사중복 개념
  - 정부 :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sup>1)</sup>
  - 감사원 : 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유사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sup>2)</sup>
  - 국회 :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sup>3)</sup>

## 2. 정부, 국회, 감사원의 유사중복 관리체계

- (정부) 기능별 조정기구에 의한 독자적인 유사중복 식별을 제외하면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유사중복 식별은 거의 대부분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관련<sup>4)</sup>
  -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지표 중 하나로 사업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유사중복 관련 평가지표를 포함

---

1) 기획재정부(2014),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 김찬수,오윤섭(2013), "공공부문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3) NABO(2013), 201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4) 김찬수,오윤섭(2013), "공공부문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획재정부가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해 심층분석·평가를 실시. 부처 간 유사중복도 그중 하나

- 2012년 유사중복 관련 심층평가 대상

- 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군 : 통일부 산하 사업주체 간 중복, 유관부처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
- ② 문화여가 지원사업군 : 유사중복사업 조정
- ③ 고용지원금 사업군 : 세부사업별 유사중복 가능성 분석
- ④ 해외수출 지원사업군 : 부처별 수출지원사업 신설하여 중복 지원 및 비효율 초래, 부처 간 중복 지원 조정
- ⑤ 문화콘텐츠 지원사업군 : 부처 간 협조체계 미비 및 유사중복
- ⑥ 정보화 사업군 : 정보시스템 중복 구축, 기관 간 연계미흡
- ⑦ 대기질 개선사업군 : 대기개선 사업 간 유사중복·상충, 연계방안 검토

<표 1>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유사중복 관련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반재정,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평가 지표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점)	1-3 다른 사업과 불필요한 유사중복이 없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5점)
측정 방법		사업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 확인 (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정부·지자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판단 기준	‘예’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이 다른 경우</li> <li>•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 대상이 다른 경우</li> <li>•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유사사업 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li> </ul>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li> <li>• 지원 분야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li> <li>• 지원 대상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li> </ul> * 하나 이상 유사중복이 있으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 3가지 모두 유사하더라도, 해소를 위한 사전조정실적이 있는 경우
	‘아니오’	• 사업목적, 수혜 대상 유사	3가지 중 하나 이상 유사하고,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사업 간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 주체에 의해 추진된 경우</li> <li>• 외부기관, 내부평가에서 유사성 지적에도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li> <li>* 부처에서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 경우 3점 추가 감점</li> <li>* 세부사업 중 일부가 '아니오'인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li> </ul>	<p>중복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p> <p>* 부처에서 유사중복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외부전문가에서 지적사례가 있고 이를 반박할 수 없는 경우</p>
--	--	--

자료: 김찬수,오윤섭(2013)

- (국회) 국회는 예·결산 심사를 통해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NABO)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 유사·중복 여부를 분석
- 국회 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전체 시정요구 사항은 2011년 기준 1,236개였으며 이중 유사중복에 해당하는 사항은 35개로 나타남

<표 2>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구분	전체시정요구사항	유사·중복시정요구사항	유사·중복 유형	
			부처 내	부처 간
2008	756	34	17	17
2009	1,039	34	20	14
2010	1,107	38	11	27
2011	1,236	35	16	19

자료: NABO(2012),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주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년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NABO에서 작성

- 결산 심사뿐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유사·중복 사업 <참고 1>
- 2010년 이후 국회 예산정책처(NABO)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여 발표
  -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서 유사중복으로 분류한 사업은 2010년도 12개, 2011년도 11개, 2012년도 31개, 2013년도 36개, 2014년도 36개

**<표 3> NABO 예산안 분석 상 유사중복 사업**

구분	2010년도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사업수(개)	12	11	31	36	36

자료: NABO(2013), 201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 예산정책처(NABO) 사업의 목적, 내용,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유사중복성 여부를 분석하며, 대상사업은 신규, 부처내, 부처간으로 유형화
  - 2014년도 유사중복 사업은 부처내는 20건, 부처간은 16건이며, 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13건
  -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의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47억 6,400만원(5.34%) 증가한 8,827억 5,100만원

□ (감사원) 감사원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예산낭비 유형을 중심으로 중복성을 검토<sup>5)</sup>)

○ 감사원은 처분요구 중 유사중복 관련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음

- 처분요구 중 '유사'나 '중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관련 내용이 처분요구에 포함된 경우 유사중복을 식별한 것으로 파악

-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유사중복 식별은 총 62건, 기관 간 유사중복은 47건이었고 기관 내 유사중복은 15건

<표 4>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유사중복 관련 처분요구현황(2003~2012년)

구분	유사중복 처분요구	기관 간 유사중복	기관 내 유사중복
건수	62	47	15

자료: 김찬수,오윤섭(2013)

○ 감사원의 유사중복 판단기준은 유사중복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유형 별로 중복성 및 효과분석방법에 차이 보임

- 대부분의 유사중복 관련 처분요구사항은 1단계 중복성 점검과 더불어 2단계 효과분석을 함께 수행

5) 김찬수,오윤섭(2013), “공공부문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표 5> 감사원의 사업유형별 유사중복 분석방법

정책기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내용이 정형화, 대상도 명확하기 때문에 내용과 대상 중복성을 점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li> <li>• 효과성 분석은 중복조사 등의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의 문제점이나 중복조사 등에 따른 국민부담이 주로 제시</li> </ul>
정보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의 중복성'이 분석의 핵심이며, 대상의 중복성은 그리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li> <li>• 독자적인 효과분석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음</li> </ul>
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이라는 일반적인 중복성 판단 요소를 이용하여 중복성을 점검</li> <li>• 효과성 분석은 상당히 난해, 동일한 연구개발 주체가 중첩된 기간에 수행한 유사한 연구개발과제에 중복성 점검을 집중</li> </ul>
보조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이라는 일반적인 틀을 이용, 형평성 기준을 주로 적용하면서 중복 지원 방지대책을 제시</li> <li>• (지역지원사업) 사업내용이 유사한지와 서비스 범위가 지역적으로 중첩되는지를 검토, 효과분석의 핵심은 시설과잉 여부를 분석</li> <li>• (기업지원사업) 중복 지원을 통해 사업 간 중복성을 입증하고,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횟수 제한기준을 설정할 것을 통보</li> </ul>

자료: 김찬수,오윤섭(2013)

- 현재 우리나라의 유사중복 식별은 여러 기관에 의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석 없이 대부분 분야별로 따로 이루어지거나 필요시 일시적으로 이루어짐
  - 중복사업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정부뿐 아니라 국회 및 감사원에 서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전체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원인과 그에 맞는 관리방안을 확립할 필요

<참고 1> 2014예산안 국회지적 유사·중복 사업<sup>6)</sup>

구 분	사업명	유사 중복 사업 및 업무	관련부처
국회	의원외교 활동	위원회 운영지원	부처내
	종합정책 정보 DB	입법지식DB	부처내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국정평가관리	정책간행물 발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자치입법 실무	안전행정부
	영문법령집 발간	법령 영문번역 업무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법률홈다터	마을변호사제도	부처내
대법원	연수원운영지원	국제사법협력센터 운영	부처내
	일반재판운영지원	국민참여재판지원 사업 등	부처내
권익 위원회	복지사업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	보건복지부 및 고용보험기금의 홍보예산	보건복지부, 고용보험기금
기획 재정부	청년위원회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국제조세협력사업	국제조세 설명회 등	국세청
조달청	PQ기업 통·번역비 지원	통·번역비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미래창조 과학부	창조경제 기반구축	(세부사업간)	부처내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사업	부처내
	글로벌연구실사업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교육부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사업 등	환경부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전담기구 역량강화사업	부처내
	산학연 전담기구 역량강화	(세부사업간)	부처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 비 지원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부처내
	ICT 창의기업 육성	해외IT지원센터 지원 사업, 글로벌 사업화컨설팅지원사업 등	부처내,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대한민국 R&D 대전, 대한민국과 학축전	부처내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유전체 사업	다부처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다부처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 구개발, 소화율 향상 및 연하장애 개선을 위한 고령친화형 식품 가 공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 비 지원	도시돌발홍수 정보제공 서비스	기상청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HACCP 지원사업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통신 정보화 및 정책지원	ICT R&D	부처내

6) 2014년도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

교육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진흥사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기존의 국가 기반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업	타부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세부사업간)	부처내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부처내
	과학기술인재육성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사업	부처내
	세계로 프로젝트	타부처 국제화 지원사업	타부처
	한국사보급사업	(세부사업간)	부처내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부처내
문화재청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세부사업간)	부처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세부사업간)	부처내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자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에 이미 이양된 사업	지자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노동부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	공예관광상품개발	부처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	교육부
	스포츠산업육성	은퇴선수 지원사업	대한체육회
	인적자원 육성관리	한국영화아카데미 등	부처내
	영화정책 지원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운영	부처내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MICE산업 육성지원	부처내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문화정보센터 운영	부처내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단체에 대한 대관료 지원 사업들	부처내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세부사업간)	부처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보건복지부
학교 통일교육 강화		통일체험프로그램 등	부처내
외교부	한중 간 인문교류 사업	타부처 한중교류 관련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타부처 아프리카 관련 사업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ODA 정책·집행·평가 체제 선진화	국무조정실 산하 평가소위원회의 평가 업무	국무조정실 등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매력한국알리기, 코리아 콘테스트 등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부처내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대외대응	KOTRA의 무역사절단 업무	KOTRA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대중국외교기반 강화	부처내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림축산부

안전 행정부	방재기술연구개발	지진피해 관련 연구	소방방재청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발도상국 방재담당 공무원 초청연수교육	소방방재청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사업	교육부
농림축산 식품부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한식세계화 사업	부처내
중소 기업청	해외고급기술개발 인력활용	해외전문가활용 중소기업역량강화	산업부
산업부	기업주치의 센터	중소기업 건강진단 시스템	중소기업청
	산업융합 기술산업 핵심기술 개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보건 복지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암환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처내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	부처내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부처내
	보건복지콜센터	기획조정실의 기본경비	부처내
	보건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계약산업 육성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사업	부처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의 업무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용 노동부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재능활용형 일자리사업	부처내
	고용평등업무지원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사업	부처내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KOTRA의 해외투자기업을 지원	KOTRA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부처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고성 집중관리 기술지원사업	부처내
환경부	도시침수대응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방방재청
	야생화보급 및 생태우수지역 조사·보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사업들	부처내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지원사업	부처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여러 기관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들	부처내
여성 가족부	아동양육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교육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부처내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성범죄 피해자 관련 사업	법무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부처내

## II. 미국 행정부의 유사중복 사업 관리7)

### 1. 입법적 관리

-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의 우선적 정책으로 세수낭비 절감, 정책집행 간소화, 정부 서비스의 질 개선과 함께 중복·낭비(eliminate duplication and waste) 폐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
- 오바마 행정부는 2010~12년 기간 동안 매년 예산을 통해 평균 15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 종료(terminations), 축소(reductions), 예산절감(savings)을 이룸. 이는 평균 250억 달러에 해당
  - 2010년 예산의 경우 행정부에 의해 제안된 재량적 재정지출 삭감안 중 60%에 이르는 비율이 입법화
  - 2012년은 250억 달러 규모의 종료, 축소, 예산절감이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중 92%인 23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제안이 의회에서 통과

<표 6> 2010~12년 입법 조정된 주요 유사중복 사업

구분	내용	효과
보건 프로그램 종료	· 동일한 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유사중복 성격을 보이는 3개의 보건 사업을 종료	· 3억 8천만 달러의 세금 절감
병해충 프로그램 재편성	· 농무부의 병해충 프로그램을 재편성 · 주정부와 지역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 우선권 배제	· 7500만 달러 절감
중복적인 경제개발 프로그램 종료	· 중복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제거 · USDA's Forest Service의 Economic Action Program은 폐수 시스템 설계 사업 등과 중복	· 500만 달러 절감
홍수 및 유역관리 프로그램 삭감	· 재원 지원에 있어 성과 기준이 없으며, 여타 홍수방지 프로그램에 비해 회수의 경제	· 3천만 달러 절감

7) White house(2012), Building a 21st Century Government by Cutting Duplication, Fragmentation, and Waste.

	적 효과가 낮음	
수자원 기반시설 지원의 중복성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할당에 있어 경쟁적 요소 및 성과 기준이 결여</li> <li>· 중복적 성격의 예산을 제거하고 주정부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li> </ul>	· 1억 5700만 달러 절감
중복적 통신 지원 프로그램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는 공공 방송협회(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를 통해 이미 공공 통신 지원</li> <li>· 상무부의 Public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Grant Program은 중복성 존재</li> </ul>	· 2천만 달러 절감
중복적 교육프로그램 예산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개의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부의 기타 재정지원 사업 및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중복</li> </ul>	· 8,200만 달러 절감

□ 2012년 2월 행정부는 「정부 개혁 및 통합 법(Reforming and Consolidating Government Act of 2012)」을 의회에 상정

- 동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대한 통합과 불필요한 중복 사업의 제거를 의회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 대통령의 제안은 조직의 축소 및 비용절감 사항에 한하며, 의회는 제안된 사항을 찬반투표로 결정

□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개혁 및 통합 법」에 따라 소기업 관련 사업과 수출무역 사업의 중복문제를 해결

- 2012년 2월 6개 기관에서 분산되어 중복 수행되고 있던 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인 'BusinessUSA'에서 수행하도록 조정
- 2012년 2월 대통령은 수출진흥 각료회의(EPC:Export Promotion Cabinet)에 수출무역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의 유사중복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

**<참고 2> 정부 개혁 및 통합 법(Reforming and Consolidating Government Act of 2012)**

**(Sec. 1) Short Title.**

The title of this Act is the "Reforming and Consolidating Government Act of 2012".

**(Sec. 2) Providing Consolidation Authority.**

Establishes the definition of an efficiency-enhancing plan, which is a reorganization plan that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determines will result in 'Or is likely to result in: (a) a decrease in the number of Federal agencies; or (b) cost savings in performing the func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plan.

Allows the President to propose to create, rename, abolish, or transfer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consolidate two or more executive departments or agencies). The additional existing restrictions on reorganization plans remain unchanged.

**(Sec. 3) Duration and Scope of Authority.**

Requires that any reorganization plan must be an efficiency-enhancing plan, and provides consolidation authority for two years after enactment of this Act.

**(Sec 4) Severability.**

Provides that if part of the Act is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ct will not be affected.

□ 2013년 예산에서 오바마 정부는 2022년까지 5,2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비효율, 유사중복, 더 이상 불필요한(outdated) 사업을 식별하고 해당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

<표 7> 2013년 예산안에 포함된 유사중복 사업 조정 방안

구분	대상사업 및 내용	효과
재정 서비스 통합	· Bureau of the Public Debt(BPD) 과 the Financial Management Service(FMS) 통합	· 2014-18년 동안 350억 달러 비용절감 가능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사무국 폐쇄	· 농무부의 260여개 유관 사무국	· 사무국 폐쇄를 통해 5,800만 달러 절감 · 행정기능 통합을 통해 200만 달러 절감
데이터센터 합병	· 2012년 525개의 데이터센터 폐쇄 · 2015년까지 약 40%에 해당하는 1,200개의 데이터센터 폐쇄	· 2013년 국방부 예산 중 3억 달러 절감
교육프로그램(38 K-12) 통합	· 16개 관련 프로그램	-
교통프로그램 간소화	· 55개 교통 프로그램을 5개로 간소화	· 성과 중심적이고 유연성 있는 교통정책 가능
가족 주택 프로그램 통합	· Housing Choice Voucher와 Public Housing 통합	· Public Housing Authorities의 일관성 있는 주택 정책 수행 가능
수자원 프로그램 합병	· Central Utah Project Completion Act program과 기타 유관 사업	-
자원복원 프로그램 통합	· 유역 보호 프로그램을 National Forest System (NFS)으로 통합	· 산림자원, 수질 효과적으로 개선
지적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통합	·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FITW: First in the World)을 대규모 프로그램과 통합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 사무국, 연구	·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 프로그램과 내무부(Department of	·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

소 폐쇄 및 통합	the Interior)의 관련 프로그램 통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지역 사무국 개혁	· 5개 기관(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the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the Solicitor, the Women's Bureau, and the Office of Public Affairs)에서 통합	-
직업재활프로그램 통합	· 3개로 분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Vocational Rehabilitation State Grants Program으로 통합하여 시행	· 유사중복 제거, 행정비용 절감,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안보관련 사업 통합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시행하고 있는 16개의 지원프로그램을 1개로 통합	· 사업 간소화 및 일원화를 통해 유사중복으로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
약물남용 방지 지원금 통합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State Substance Abuse Prevention Grant를 중심으로 통합	· 주정부와 지역에 대한 조직적 지원 가능
상무국 사무국 통합	·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의 중복성 있는 5개의 사무국을 1개로 통합 운영	· 간접비 절감하며, 소수민족 소유기업에 대한 서비스 증진
이민행정의 중복성 제거	· 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program을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nd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로 통합	· 운영의 중복성 제거

## 2. 행정적 관리

-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의 조정도 시행
  -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부처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형태의 다부처 목표(cross-agency goal)를 설정하여 프로그램 간 조정을 유도
    - 다부처 우선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는 정부 홈페이지(performance.gov)에 공개되며, 예산관리처(OMB)에 의해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점검 받음
  - 일부 사안의 경우 입법적 조치 전에 유사중복 및 업무 간 분절에 대한 행정적 차원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표 8> 유사중복 조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의 예

구분	대상사업 및 내용
Affordable Rental Housing	· Rental Policy Working Group을 통해 HUD, USDA, 재무부에서 산재되어 수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조정하도록 함
Improper Payments	· Medicare, Medicaid, Unemployment Insuranc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등에 대한 지불 오류 시정을 대통령이 직접 목표로 설정, 2010-11년간 200억 달러 절감한 것으로 평가
Shared IT Services	· 행정부가 Shared-First initiative를 만들어 기관 간 IT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함 · OMB는 관련 기관에 대해 IT시스템 및 서비스 중복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치(M-11-29)를 시행
STEM education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연방정부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교육 분야 지출에 대한 유사 중복 및 업무분절 여부를 분석 · OMB는 STEM 교육에 대해 다부처 우선 목표를 설정 · 2012년 11개의 프로그램이 정리되었으며, 2013년에는 33개 프로그램이 정리됨

### Ⅲ. 감사원(GAO)의 유사중복 식별

#### 1. 미국 감사원의 유사중복 개념

□ 미국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유형으로 정부조직 간 임무분절, 프로그램 간 중복, 프로그램 유사중복을 정의

○ 정부조직 간 임무분절(fragmentation)

- 'fragmentation'는 동일한 영역의 국가적 목적 달성에 한 개 이상의 기관 혹은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We used the term **fragmentation** to refer to those circumstances in which **more than one federal agency** (or more than one organization within an agency) is involved in the **same broad area of national need**"*

○ 프로그램 간 중복(overlap)

- 'overlap'은 여러 부처나 프로그램이 유사한(similar) 목표를 갖거나,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구사하거나,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We used the term **overlap** when multiple agencies or programs have **similar goals**, engage in **similar activities or strategies** to achieve them, or target **similar benefici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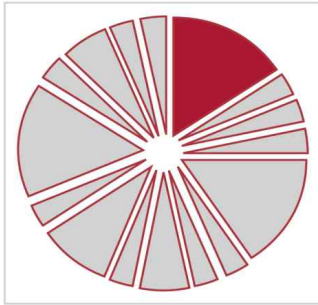
○ 프로그램 유사중복(duplication)

- 'duplication'은 둘 이상의 부처나 프로그램이 동일한(same)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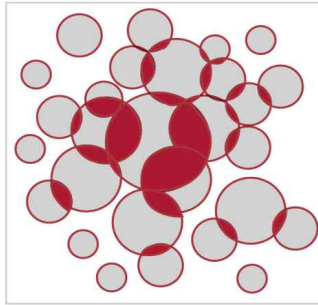
*"We considered 'duplication' to occur when two or more agencies or programs are engaged in the **same activities or provide the same services to the same beneficiaries**"*

### [그림 1] GAO의 정책비효율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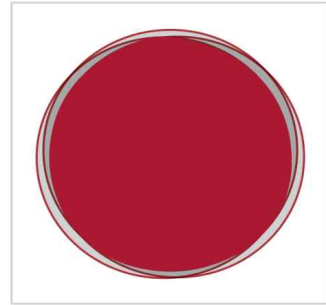
**Fragmentation** refers to those circumstances in which more than one federal agency (or more than one organization within an agency) is involved in the same broad area of national need and opportunities exist to improve service delivery.



**Overlap** occurs when multiple agencies or programs have similar goals, engage in similar activities or strategies to achieve them, or target similar beneficiaries.



**Duplication** occurs when two or more agencies or programs are engaged in the same activities or provide the same services to the same beneficiaries.



자료: GAO(2014), “Annual Report”, p.2

□ 국내 일부 연구는 GAO가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비효율적 사업 유형 중 유사중복과 관련된 유형은 ‘duplication’과 ‘overlap’이라고 언급<sup>8)</sup>

- GAO의 정의는 지원 서비스 간 유사중복의 속성으로 목표·내용·대상이라는 틀을 제시
- ‘duplication’은 내용·대상의 동일성으로, ‘overlap’은 목표·내용·대상 중 일부의 유사성으로 정의
- 동일과 유사에 대해서는 일상적 용어 수준에서 구별하고 있으며,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음

<표 9> GAO의 유사중복 개념정의

구분	대상	내용
Duplication	부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활동</li> <li>·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li> </ul>
Overlap	부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목표</li> <li>·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li> <li>·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li> </ul>

자료: 김찬수,오윤섭(2013), “공공부문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p.19

8) 김찬수,오윤섭(2013), “공공부문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참조

## 2. 유사중복 연간실태보고서

□ 감사원(GAO)은 매년 연간실태보고서<sup>9)</sup>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 (근거법) 2010년 개정된 「공공부채 상한조정에 관한 법(Increasing Statutory Limit on the Public Debt 2010)」에 의거

### <참고 3> 공공부채 상한조정에 관한 법(Increasing Statutory Limit on the Public Debt 2010)

Public Law 111-139 (2010) Increasing the statutory limit on the public debt

TITLE II—ELIMINATION OF DUPLICATIVE AND WASTEFUL SPENDING  
SEC. 21. IDENTIFICATION, CONSOLIDATION, AND ELIMINATION OF  
DUPLICATIVE GOVERNMENT PROGRAMS.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hall conduct routine investigations to identify programs, agencies, offices, and initiatives with duplicative goals and activities within Departments and government-wide and report annually to Congress on the findings, including the cost of such duplication and with recommendations for consolidation and elimination to reduce duplication identifying specific rescissions.

- (목적) 매년 정기적으로 연방정부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현황과 그에 따른 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불필요한 임무분절 및 프로그램 유사중복이 존재하는 정부 부문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actions)를 제안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경제적 재정적 효과 분석(section 1)
  - 추가적으로 잠재적 비용 절감 및 수입 증대의 가능성이 있는 부문 제시(section 2)

9) GAO(2014), Annual Repor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Other Financial Benefits.

- (연혁) 2011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188개 부분에 있어, 행정부 기관 및 의회가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440개의 조치(actions)를 제안
  - (2011) 첫 연례 보고서로, 행정부 기관 및 의회의 비효율성이 존재 하는 81개<sup>10)</sup> 부분을 제시(section1 34개, section2 47개)
  - (2012) 51개 부분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 발행 (section 1 32개, section 2 19개)
  - (2013) 31개의 부분을 추가 발견 (section1 17개, section2 14개)
  - (2014) 26개 부분을 추가로 지적 (section1 11개, section2 15개)
- (조사범위) 정부사업 전 영역이 대상이 되며<sup>11)</sup>, GAO 내부 혹은 주요 외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가능성이 지적된 사업 등이 후보대상 사업이 됨
  - 다면적접근(multiphase approach)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한 후 선정된 일부 사업들만 연간보고서로 발간
  - GAO는 광범위한 영역의 유사중복 이슈를 다루지만, 연간 실태보고서는 그 일부만을 다루고 있음("the areas identified in our annual reports do not represent the full extent of our systematic examination")
- (검토자료) GAO 내부자료 뿐만 아니라 OMB, CBO 등 주요 외부자료 활용 하여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
  - OMB의 MAX Information System
    - 연방정부 예산기능(Budget function) 및 하위기능 검토
  - 해당 기관의 주요 문서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비슷한 미션, 목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불 필요한 유사중복, 업무분절이 존재할 가능성 높음. 해당 기관들의 주요

10) 2011년 보고서에서 81개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Areas75과 Areas76이 합쳐져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하여 총 80개로 보고

11) 2010년까지 GAO의 유사중복사업 분석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나 대상은 특정 영역에 한정

문서 검토하여 기관의 미션, 목표, 프로그램을 명확히 파악

-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s), 성과평가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s), 예산서(budget justifications) 등이 이에 해당

- 주요 외부 기관 자료

-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감찰관(Inspectors General),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 등

<표 10> 유사중복 식별에 사용되는 자료

GAO 자료	외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과거 25년 간의 200여 개 보고서</li> <li>• GAO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비용절감요인</li> <li>• GAO 고위험시리즈</li> <li>• 과거 GAO 정부개편/구조조정 보고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MB의 MAX Information System</li> <li>• 해당 기관의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s), 성과평가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s), 예산서(budget justifications)</li> <li>• 의회예산국(CBO), 감찰관(Inspectors General) 및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서</li> </ul>

자료 : GAO(2013), "Annual Report", p.234

김찬수,오윤섭(2013), "공공부문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p.186

## IV. 2014년도 연간실태보고서<sup>12)</sup>

### 1. 권고조치의 이행여부 평가

- 2011-13년도 연간보고서에서 지적된 조치(actions)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기준을 제시 : 입법조치와 행정조치 측면
  - 부분(area)에 대한 평가는 전반점수(overall assessment rating) 방식
    - "addressed" : 해당 부문에 제안되었던 모든 조치가 시행되었을 경우
    - "partially addressed" : 최소 하나 이상의 조치가 시행되긴 했지만, 모든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닌 경우
    - "not addressed" : 제안되었던 모든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 입법적 조치에 대한 평가 기준
    - "addressed" : 관계 법률이 발효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모두 처리된 경우
    - "partially addressed" : 관계 법안이 위원회, 상원 및 하원에서 통과되었거나 법령이 발효되었지만, 일부 조치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 "not addressed" : 관계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은 경우나,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
  - 행정적 조치에 대한 평가 기준
    - "addressed" : 제안된 조치 모두 시행
    - "partially addressed" : 제안된 방안이 발전 단계에 있는 경우, 즉 도입은 하였으나 조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 "not addressed" : 행정부 및 관계 기관이 수행해야할 조치가 최소한으로 시행되었거나 혹은 진전이 없는 경우

---

12) GAO(2014), Annual Repor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Other Financial Benef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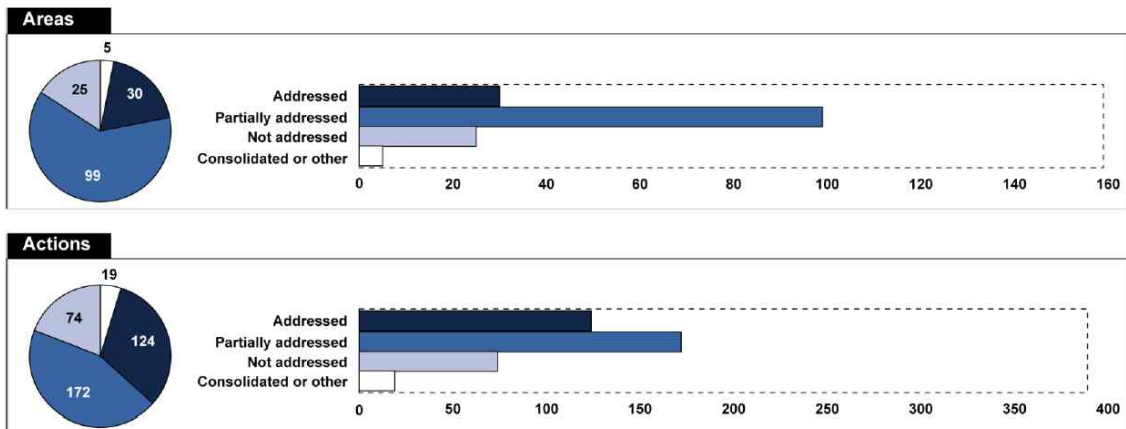
<표 11> 권고 사항 이행여부 평가 기준

구분	표시	기준
부분	addressed	모든 조치가 시행
	partially addressed	모든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닌 경우
	not addressed	제안되었던 모든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입법적 조치	addressed	법률이 발효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시행
	partially addressed	일부 조치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not addressed	관계 법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않은 경우
행정적 조치	addressed	제안된 조치 모두 시행
	partially addressed	제안된 방안이 발전 단계에 있는 경우
	not addressed	최소한으로 시행되었거나 혹은 진전이 없는 경우

자료 : GAO(2014)

- 2011-13년 동안 행정기관과 의회에 대해 총 162개 부분(area), 380개 조치(action)가 권고되었으며 이행평가 결과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 (부분) 162개 부분 중 30개(9%)가 완전히 시정되었으며, 99개(61%)가 부분적으로 시정되었고, 25개(15%)는 시정되지 않음
  - (조치) 권고 받은 380개 조치중 124개(32%)가 반영되었으며, 172개(44%)는 부분 반영되었고, 74개(19%)는 반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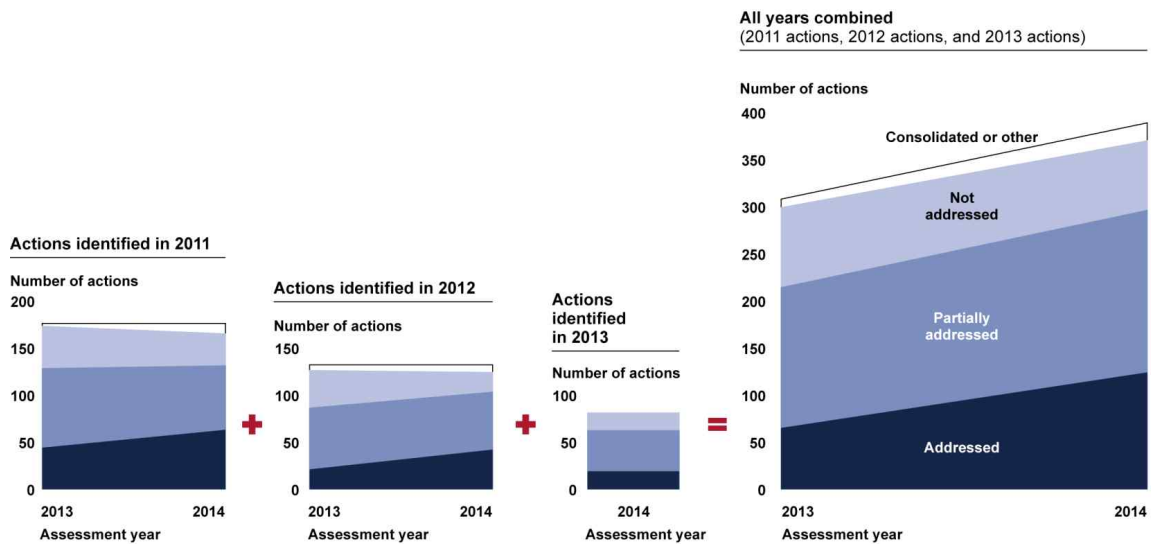
[그림 2] 2011-13년 권고사항 이행 평가



자료 : GAO(2014)

- 2014년도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9개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addressed)되었다고 평가
- 59개 조치의 제안 년도를 보면, 2011년에 19개, 2012년 21개 2013년 19개로 나타남

[그림 3] 2013년 2014년 보고서의 권고조치 이행 비교



자료 : GAO(2014)

-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차원에 대한 권고조치 중 64%가 시정되지 않거나 부분시정된 것으로 나타남
- 47%에 해당하는 31개 조치가 관계 법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않았으며, 17%에 해당하는 11개의 조치는 일부 시정됨
- 행정기관 차원에 대한 권고조치 역시 63%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분적으로 시정된 권고조치는 50%에 해당하는 161개이며, 13%에 해당하는 43개 조치는 일부 반영됨

<표 12> 2011-13년 권고조치 이행 비율

	의회		행정기관	
	권고조치 수	비율(%)	권고조치 수	비율(%)
addressed	18	27	106	33
partially addressed	11	17	161	50
not addressed	31	47	43	13
통합 및 기타	6	9	1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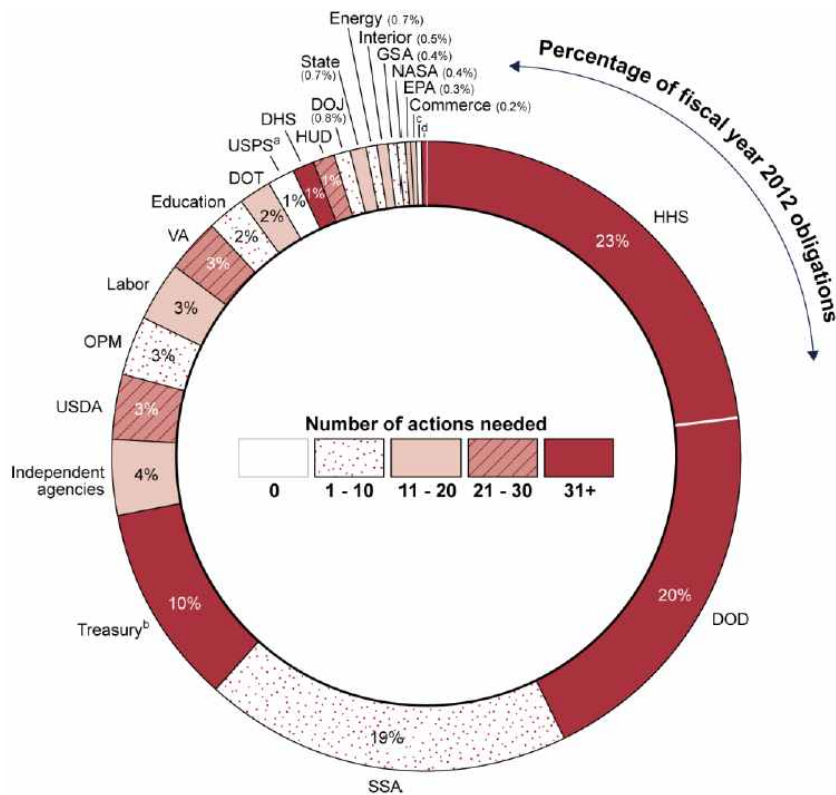
자료 : GAO(2014)

## 2. 이행조치 현황

### □ 2011-14년 권고조치의 부처별 현황

- 2014년 보고서에서 60여개의 조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GAO는 2011-14년 기간 동안 총 188개 부분에 대해 약 440개의 조치를 권고

[그림 4] 행정기관별 예산비중과 권고조치 현황(2012년 기준)



자료 : GAO(2014)

주 : 여러 부처 및 기관에 걸친 권고조치는 중복 계산됨

- 권고조치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15개 부처와 17개 이상의 기타 연방 독립체 (entities)에 분포하고 있으며, 권고조치 중 상당수가 예산이 큰 부처에 분포
  -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에 108개, 보건사회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49개, 재무부(Treasury)에 65개의 권고조치가 내려짐. 이들 예산 2012년 기준 총예산의 53%를 차지
- 각 부처 및 기관에 내려진 권고조치의 이행 상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GAO는 2013년부터 'Action Tracker'를 웹사이트에 공개 <참고 4>

<참고 4> GAO의 Action Tracker

- GAO는 웹사이트 상 지난 연간실태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유사중복 사안, 해결 방안과 관련된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공개<sup>13)</sup>
- (예) Food Safety 부분 : 2011년 GAO는 해당 부분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의 조치를 권고
  - (Action1-행정적) OMB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과지향적 목표, 성과측정, 전략 및 자원 계획을 포함하는 성과계획(performance plan)을 개발
    - “partially addressed” : OMB는 성과계획 개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관 간 일정부분 협의가 이루어짐
  - (Action2-입법적) 의회는 대체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국립과학아카데미 혹은 ‘blue ribbon panel’에서 수행할 수있도록 입법적 근거 마련
    - “not addressed” : 입법적 조치 미비
  - (Action3-입법적) 의회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리스크 기반의 식품안전 법안을 마련
    - “Consolidated or Other” : 2011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재정으로 더 이상 GAO의 평가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



**Agriculture: Food Safety**

Fragmented food safety system has caused inconsistent oversight, ineffective coordination, and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OVERALL STATUS:** Partially Addressed

**Year Identified:** 2011

**Area Number:** 1

**Area Type:** Fragmentation, Overlap & Duplication

Share This:

ACTION 1

**ACTION 2**

ACTION 3

RELATED GAO LINKS

GAO CONTACT

**Status:** Not Addressed

**Type:** Congressional

**Last Updated:** March 6, 2014

**Action:**

Congress should consider commissioning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r a blue ribbon panel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alternative food safety organizational structures. GAO first made this recommendation in 2001. Such an assessment could help reduce fragmentation of federal food safety oversight and how it results in inconsistent oversight, ineffective coordination, and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Progress:**

No legislative action identified. GAO identified the need for a blue ribbon panel to study food safety in October 2001. A blue ribbon panel assessment could help identify ways to reduce the fragmentation of federal food safety oversight.

### 3. 2014년 신규 추가 부분

- (section 1) 5개 임무(missions)의 11개 부분(areas)에 대해 임무분절, 프로그램 간 중복, 프로그램 유사중복으로 판단되는 사업 제시
  - 중복의 비용과 해결방안(통폐합 등)을 포함
- (section 2) 7개 임무의 15개 영역의 비용절감 혹은 수입 증가가 가능한 사업 제시

<표 13> 2014년 유사중복 및 임무분절 부문

Mission	Areas Identified	Page
Defense	1. <b>Army Workforce Planning:</b> To address potential overlap between two Army information systems that support workforce planning for weapon system maintenance, manufacturing, and other industrial operations, the Army should increase leadership attention to the issue and establish a fully developed and documented approach for completing a timely assessment of unnecessary overlap, which could lead to millions of dollars in annual savings.	36
	2. <b>Contracting for Defense Health Care Professionals:</b> The Department of Defense should develop a consolidated agency-wide strategy to contract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reduce fragmentation and achieve greater efficiencies.	41
	3. <b>Defense Satellite Control Operations:</b> Increased use of shared satellite control networks and leading practices within the Department of Defense could reduce fragmentation and potential duplication associated with dedicated systems, resulting in millions of dollars in savings annually.	45
	4. <b>Defense Studies and Analysis Research:</b> To address fragmentation in the processes used across the department to request studies and analysis research and limit the potential for overlap and duplication in research activities, the Department of Defense should establish a mechanism that requires the military services and other departmental offices to formally coordinate their annual research requests.	52
	5. <b>POW/MIA Mission:</b> The Department of Defense should minimize overlapping and duplicative efforts by examining options to reduce fragmentation and clarify guidance on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eight organizations that account for missing person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ission.	60
Health	6. <b>Federal Autism Research:</b> Because much of the \$1.2 billion that federal agencies spent on autism research from fiscal years 2008 through 2012 had the potential to be duplicative, the Interagency Autism Coordinating Committee and federal agencies should improve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autism research to help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68
	7. <b>Minority AIDS Initiative:</b> Consolidating the fragmented funding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inority AIDS Initiative into core HIV/AIDS funding would likely reduce grantees' administrative burden and help the agency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provide services to minority populations who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HIV/AIDS, with the approximately \$3 billion used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to fragmentation, we found that the services provided by Minority AIDS Initiative grantees overlapped with those provided by core HIV/AIDS grantees and were provided to similar populations; this overlap increases the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75
Income security	8. <b>Disability and Unemployment Benefits:</b> Congress should consider passing legislation to prevent individuals from collecting both full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an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hat cover the same period, which could save \$1.2 billion over 10 years in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81
	9. <b>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nd Unemployment Benefits:</b> Changes to enhance the sharing of compensation and wage information between state and federal agencies could improve the Department of Labor's ability to identify potentially improper payments, including inappropriately overlapping payments from 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program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administered by the states.	84
Information technology	10. <b>Interoperable Radio Communications Systems:</b> Better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that rely on radio communications solutions for mission-critical operations would help to address fragmentation in their approach to improving the interoperability of radio communications systems and has the potential to achieve savings.	89
International affairs	11. <b>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b> To promot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more effectively,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hould define how they are to interact in their efforts; the lack of defined roles has at times created tensions with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95

13) [http://www.gao.gov/duplication/action\\_tracker/all\\_areas](http://www.gao.gov/duplication/action_tracker/all_areas)

<표 14> 2014년 비용절감 및 수입증대 가능 부문

Mission	Areas Identified	Page
Defense	12. <b>Combatant Command Headquarters Costs:</b> The Department of Defense could potentially achieve tens of millions or more in cost savings annually if it (1) more systematically evaluates the sizing and resourcing of its combatant commands and (2) conducts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f options for the location of U.S. Africa Command's headquarters.	100
Energy	13. <b>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 Program:</b> Unless the Department of Energy can demonstrate demand for new 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s and viable applications, Congress may wish to consider rescinding all or part of the remaining \$4.2 billion in credit subsidy appropriations.	108
General government	14. <b>Coin Inventory Management:</b> The Federal Reserve should develop a process to assess factors influencing coin management costs and identify practices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millions of dollars in revenue enhancement.	112
	15. <b>Collection of Unpaid Federal Taxes:</b> The federal government can increase tax revenue collections by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ver a 5-year time period by identifying and taking actions to limit issuance of passports to applicants, levy payments to Medicaid providers, or identify security-clearance applicants with unpaid federal taxes.	115
	16. <b>Federal Real Property Ownership and Leasing:</b>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could potentially achieve millions of dollars in savings by using capital-planning best practices to create a long-term strategy for targeted ownership investments to replace some high-value leases.	122
	17. <b>Online Taxpayer Services:</b>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ould potentially realiz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cost savings and increased revenues by enhancing its online services, which would improve service to taxpayers and encourage greater tax law compliance.	128
	18. <b>Real Estate-Owned Properties:</b> Improvements to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s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s disposition and oversight practices for foreclosed properties could produce increased sales proceeds and savings from maintenance and other expenses from holding properties total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132
	19. <b>Reverse Auctions in Government Contracting Including Commercial Items:</b> Due to increasing government use of reverse auctions—with over \$1 billion awarded in contracts in fiscal year 2012—additional guidance may help maximize opportunities to increase competition and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ed cost savings.	139
	20. <b>Tax Policies and Enforcement:</b>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an realize cost savings and increase revenue by, among other things, identifying continued offshore tax evasion and evaluating whether the agency's streamlined corporate audit process is meeting its goals.	143
Health	21. <b>Medicaid Demonstration Waivers:</b> Federal spending on Medicaid demonstrations could be reduced by billions of dollars i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ere required to improve the process for reviewing, approving, and making transparent the basis for spending limits approved for Medicaid demonstrations. GAO's work between 2002 and 2013 has shown that HHS approved several demonstrations without ensuring that they would be budget neutral to the federal government.	149
Income security	22. <b>Disability Insurance:</b>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ould prevent significant potential cash benefit overpayments in the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by obtaining more-timely earnings data to identify beneficiaries' work activity that is beyond program limits and suspend benefits	154
	23. <b>Veterans' and Survivors' Benefits:</b>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irect spending could be reduced—by an average of about \$4 million annually,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if new statutory provisions were enacted, namely, a look-back review and penalty period for claimants who transfer assets for less than fair market value prior to applying for pension benefits that are available to low-income wartime veterans who are at least 65 years old or have disabilities unrelated to their military service. This action would help to ensure that only those in financial need receive benefits and make the program more consistent with other federal programs for low-income individuals.	159
Information technology	24. <b>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Portfolio Management:</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multiple agencies could help the federal government realize billions of dollars in savings by taking steps to better implement PortfolioStat, a process to help agencies manage their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s.	163
Social services	25. <b>Better Data to Mitigate Foreclosures:</b>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s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and the Departments of Veterans Affairs and Agriculture could improve outcomes and better manage the costs associated with foreclosure mitigation efforts with additiona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otentially saving taxpayers millions of dollars on an annual and recurring basis.	171
	26. <b>Housing Choice Vouchers Rent Reform:</b> By improv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efforts under the Moving to Work demonstration program,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ould provide Congress with information to determine which rent reform option should be implemented program-wide and thereby potentially reduce program funding by millions of dollars or extend housing assistance to additional low-income households or some combination of these outcomes.	176

## 8. Disability and Unemployment Benefits

Congress should consider passing legislation to prevent individuals from collecting both full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an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hat cover the same period, which could save \$1.2 billion over 10 years in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Why This Area Is Important

Disability Insurance (DI) and Unemployment Insurance (UI) provide important safety nets for U.S. workers who have lost their income. DI, administered b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is the nation's largest cash-assistance program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DI benefits replace lost wages due to a disability that prevents work. Benefit amounts are determined based on an individual's earnings history. In fiscal year 2010, more than 10 million beneficiaries received DI cash benefits totaling \$121.6 billion. DI benefits are paid from the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 and are financed by payroll taxes paid by covered workers and their employers, on the basis of each worker's earnings history.

The Department of Labor (DOL) oversees the federal-state UI program, which replaces wages when someone who is able to work loses a job through no fault of his or her own. States establish the amount of UI benefits based on the worker's covered employment. UI benefits and administrative costs are financed primarily by taxes levied on employers paid into a federal Unemployment Trust Fund set aside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federal law provides for extending the duration of UI benefits in periods of high and rising unemployment. In fiscal year 2010, 11.3 million beneficiaries received UI cash benefits totaling \$156 billion, \$93 billion of which was paid by the federal government.<sup>1</sup> Both the UI and DI trust funds face serious fiscal sustainability challenges, prompting the need to examine opportunities for potential cost savings.

### What GAO Found

In July 2012, GAO reported that in fiscal year 2010, 117,000 individuals received concurrent cash benefit payments from the DI and UI programs of more than \$850 million, which can occur because current law does not preclude the receipt of overlapping benefits. The 117,000 individuals GAO identified as receiving concurrent DI and UI benefits represented less than 1 percent of the total beneficiaries of both programs, but the cash benefits they received totaled over \$281 million from DI and more than \$575 million from UI in fiscal year 2010. These benefits represented less than one-quarter of 1 percent and less than one-half of 1 percent of

<sup>1</sup>The federal portion is funded through a combination of payroll taxes and appropriated funds. Total benefits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claims filed.

---

the total benefits provided through the DI and UI programs in fiscal year 2010, respectively. One individual received over \$62,000 in overlapping benefits in a year. The average weekly UI benefit was \$299 in December 2010. The weekly maximum UI benefit in January 2011 for households without dependent benefits ranged from \$133 (Puerto Rico) to \$625 (Massachusetts).

Individuals may be eligible for concurrent cash benefit payments from both DI and UI due to differences in program eligibility requirements. Specifically, some individuals may have a disability under federal law but still be eligible for UI because they are able and available for work under state law. Further, the DI program allows disabled beneficiaries to work for up to 1 year while still receiving DI benefits in order to help them test their ability to return to the workforce. Work during this year can make the individual also eligible for UI benefits if they lose their job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For DI beneficiaries receiving UI benefits, the federal government is replacing a portion of their lost earnings not once, but twice.

GAO reported in July 2012 that although DI and UI generally provide separate services to separate populations—and thus are not overlapping programs—the concurrent cash benefit payments for individuals eligible for both programs are an overlapping benefit, as both replace lost earnings. GAO recommended that SSA and DOL evaluate this overlap and request congressional authority to eliminate it as appropriate. During the 113<sup>th</sup> Congress, several bills were introduced in both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to eliminate concurrent DI and UI cash benefits; as of February 2014, none of these bills had passed.<sup>2</sup>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stimated that such a provision would save \$1.2 billion over 10 years from fiscal year 2014 through 2023. In additio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15 budget identifies the concurrent receipt of DI and UI benefits as a loophole and includes a provision to close it.

---

## Actions Needed and Potential Financial or Other Benefits

Given that several bills have subsequently been introduced in Congress to address the identified issues, GAO suggests that Congress should consider:

- passing legislation to require SSA to offset DI benefits for any UI benefits received in the same period.

CBO estimated that changing this law to prevent individuals from collecting full disability benefits and unemployment benefits that cover the same period of time will save \$1.2 billion over 10 years.

---

<sup>2</sup>See H.R. 1502, 113<sup>th</sup> Cong. (2013); H.R. 3885, 113<sup>th</sup> Cong. (2014); S. 1099, 113<sup>th</sup> Cong. (2013); S.AMDT. 2631, 113<sup>th</sup> Cong. (2014); S. 1931, 113<sup>th</sup> Cong. (2014).

---

## Agency Comments and GAO's Evaluation

In commenting on the July 2012 report on which this analysis is based, DOL and SSA agreed with GAO's recommendation that DOL work with SSA to evaluate overlapping DI and UI benefits, take appropriate action for any payments determined to be improper, and assess whether cost savings or other benefits might be achieved by reducing or eliminating overlapping DI and UI cash benefit payments. DOL and SSA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determin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assist in this analysis. As of February 2014 they were finalizing a report addressing GAO's recommendations.

GAO provided a draft of this report section to DOL and SSA. DOL did not provide comments on this issue. SSA provided written comments. In their comments SSA stated that under existing regulations, they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reduce or withhold DI benefits due to the receipt of UI benefits. SSA also stated that their fiscal year 2014 budget included a legislative proposal to reduce or eliminate an individual's DI benefit in any month in which he or she also receives a State or Federal unemployment benefit. Further, this proposal would eliminate dual benefit payments covering the same period a beneficiary is out of the workforce, while still providing a base level of income support.

---

## How GAO Conducted Its Work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nalysis is based on findings from the product listed in the related GAO products section. GAO matched the 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 (NDNH) unemployment files with extracts of SSA disability files of DI beneficiaries as of December 2010. To determine the subset of recipients who received DI and UI benefits at the same time during fiscal year 2010, GAO identified individuals who received DI benefits in all 3 months of the quarter for which they received UI benefits. For example, to be considered in receipt of overlapping DI and UI benefits under GAO's criteria, an individual must have records in SSA disability files indicating the monthly receipt of DI benefits in January, February, and March of 2010, and must also have records in the NDNH indicating the quarterly receipt of UI benefits in the corresponding quarter of fiscal year 2010, which is the second quarter of fiscal year 2010. Using this methodology, GAO identified 117,000 individuals who received concurrent cash benefit payments from the DI and UI programs. Table 7 in appendix IV lists the programs GAO identified that might have similar or overlapping objectives, provide similar services, or be fragmented across government missions. Overlap and fragmentation might not necessarily lead to actual duplication, and some degree of overlap and duplication may be justified.

---

## Related GAO Product

*Income Security: Overlapping Disability and Unemployment Benefits Should be Evaluated for Potential Savings.* [GAO-12-764](#). Washington, D.C.: July 31, 2012.

---

## Contact Informa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is area, contact Steve Lord at (202) 512-6722 or [lords@gao.gov](mailto:lords@gao.gov).

## 참고문헌

NABO(2012),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NABO(2013), 201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김찬수·오윤섭(2013), 『공공부문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감사원 감사연구원

김찬수(2013), 『유사중복사업 식별방법론 정립을 위한 일 연구』, 감사논집 제21호

홍세호(2013), 『지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검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AO(2012),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Education

GAO(2012), 2012 Annual Report: Opportunities to reduce duplication, overlap and fragmentation, Achieving savings, and enhance revenue

GAO(2013), 2013 Annual Report: Actions Needed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Other Financial Benefits

GAO(2014), 2014 Annual Repor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Other Financial Benefits

White House(2012), Building a 21st Century Government by Cutting Duplication, Fragmentation, and Waste